

수소도시 법률 제정에 따른 미래 수소도시구현 방향

이정찬

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

정부가 혁신성동 동력 창출 3대 전략투자분야로 선정한 수소경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차원의 에너지시스템 전환, 즉 '수소도시' 조성이 필수적이다. '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'(19.10월)에서 설정한 '40년까지 전국 지자체(시/군/구) 30% 수소도시 조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소도시의 조성 and 운영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즉 수소도시법이 필수적이다.

수소도시법은 크게 계획수립, 건설사업 시행, 건설 기준 및 규제특례, 건설 지원, 추진체계 등으로 구성된다. 수소도시법이 제정이 될 경우 수소시범도시 조성·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, 현재 주거/교통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도시활동 분야를 확장하여 도시 전분야에 대한 도시 내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것이다.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수소도시 모델을 확립·추진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구축 및 수소선진국의 위상 확립, 더 나아가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이다.